

‘하이엔드’라더니…첨단 주상복합 ‘무더기 하자’

SOCIETY

2025년 9월 2일 화요일

현대건설, 부실시공 의혹…보수공사 없이 입주 강행
입주민 “하자보수 제대로 안돼” 반발…계약해지 의사
전문가 “시정조치 미이행 확인”…공정위에 피해 신고

국내 ‘시공능력평가 2위’의 1군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이 광주지역에 최고급 주거 공간으로 선보인 주상복합아파트가 무더기 하자 발견으로 부실·부적합 시공 의혹에 휩싸였다.

시행사인 그린도시개발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사이행 의무 미이행 및 입주 강행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신고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산구 월계동에 위치한 해당 주상복합아파트는 대지면적 4493㎡에 지하 3층~지상 22층, 모두 2개 동 규모로 조성됐다.

아파트는 201㎡ 68가구, 241㎡ 2가구, 244㎡ 2가구 등 총 72세대로 구성됐으며 분양가는 각각 23억9300만원, 26억8000만원, 30억원이다. 지방에서 펜트하우스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최고급 주거공간으로 홍보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건설 공사는 지난 3월 26일 광산구의 준공승인이 나서서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됐다. 문제는 입주 전 사전점검 당시 발견된 하자가 제대로 보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의 확인 없이 시공사 임의로 입주가 강행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행사는 지난 3월 8일과 10일 2차례에 걸쳐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했고, 세대 내 12건, 공동시설물 27건, 추가 점검 4건 등 총 40여건의 하자가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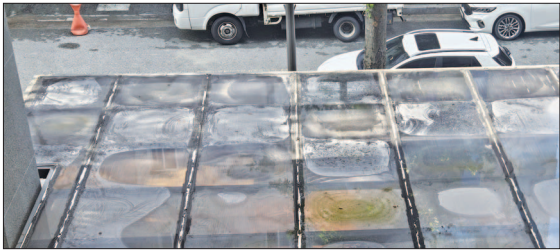
시행사는 곧바로 현대건설 측에 입주 전 하자보수를 마무리해달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12일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현장대리인의 서명이 담긴 공사이행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시행사가 준공승인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발견된 하자 관련 항목과 함께 ‘입주 시작 전까지 부적합 부분을 시정조치 하고, 이를 완료한 이후 시행사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최고급 주거공간으로 홍보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건설 공사는 지난 3월 26일 광산구의 준공승인이 나서서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침하로 건물과 이격 하자 발생



음식물·재활용 집하장 천정의 물고임 누수 하자



세대 내 누수 하자

확약한다’ 등의 문구가 담겨 있다.

이후 지난 5월 현대건설 측은 현장 조치 후 사진이 포함된 ‘공사이행합의서’ 조치 결과’를 보내왔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현대건설 측 조치 결과의 80~90%는 미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의서대로 공사이행을 촉구했지만 현대건설 측은 ‘설계대로 준공했다. 합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행했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행사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건설을 공사이행합의서의 의무 불이행 및 입주강행, 필수사업비 집행거부, 중도금 대출 연장 거부, 분양활동 방해 및 부당조건 강요 등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시행사는 지난달 28일 시공기술사, 건축사, 공학박사 등 3명의 전문가와 함께 입주자들에게 ‘공사이행합의서의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이행 여부 및 하자 확인’을 의뢰했고, 이 자리에 현대건설 광주현장 책임자도 임회했다.

전문가와 입주자들의 의견은 모두 ‘부적조로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나 전반적으로 하자 시정조치가 미이행돼 있음을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아파트·근생시설·공용부·하자부분 시정조치 이행 여부

4개 항목에 모두 ‘미이행’으로 표시했다.

현대건설이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강행하고, 시공사가 약속 미이행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시행사에 떠넘기면서 그 피해는 온전히 입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하자보수를 접수해도 수리 날짜 등 공지는커녕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아파트 계약자(세대·상가) 중 70%가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 A씨는 “건분주택에서 홍보는 거창하게 하더니 실상은 하자투성이다. 다른 아파트들의 부실 시공 소식이 남 애기가 아니다”며 “A/S를 접수했지만 지금까지도 온다간다 소식이 없다. 실망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입주자들의 불만에도 현대건설 측은 합의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문제가 있었다면 준공 승인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공사이행합의서의 설계항목 중 허가사항을 제외하고 조치를 완료했다”며 “공사비 지급 등 어려움 속에서도 입주민 편의를 위해 하자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06 달출 15:27
예보 18:58 달진 ---:--



광주		25~31
목포		25~31
여수		25~31
순천		25~32
구례		25~32
광주		24~31
임도		25~32
흑산도		24~31
고흥		25~32
진도		24~31

목포	밀물(고)	08:15 / 21:39
	썰물(저)	03:45 / 13:44
여수	밀물(고)	03:22 / 18:13
	썰물(저)	09:36 / ---:--

전남대, 교육부 ‘글로벌 랩’ 최종 선정

9년간 135억 국비 지원…글로벌 국방·AI 허브 도약

전남대학교는 1일 교육부의 ‘글로벌 랩(Glocal Lab)’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남대는 향후 9년간 매년 15억원, 총 13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글로벌 랩 사업은 지역 대학이 보유한 연구 역량을 지역과 국가 전략 산업에 접목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전남대는 이번 공모에서 △국방 무인체계 △AI 반도체 △차세대 지능형 시스템 등 지역과 국가가 동시에 필요로 하는 분야를 연계하는 연구 전략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범하는 지능형 국방 무인체계 연구소는 △지능형 RF 시스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저파탐 통신보안 △Agentic AI △퍼지집 AI 신뢰성 등 5대 연구 그룹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소는 이를 통해 국방 분야의 핵심 기술인 거점식 무인방어 체계와 이동식 무인작전 체계의 국산화와 세계화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국방 기술 연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산업 발전과 국가 전략과의 연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광주시와 전남대가 함께 추진 중인 ‘AI+X 및 AI 반도체’ 고도화 전략, 전남도와 고흥군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우주·국방 산업과 맞물려 연구 성과의 파급 효과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진 연구소장(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은 “향후 10년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보조를 맞춰 광주·전남의 지역거점연구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건설 현장 4대악 근절 촉구 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고용·체벌’ 건설 현장 4대악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금남로 원각사에 ‘6월 민주항쟁 기념비’ 세운다

7일 제막식…군사독재 저항·민주주의 쟁취 역사 담아

광주 5·18 민주화의 역사 현장에 위치한 원각사에 ‘6월 민주항쟁 기념비’가 세워진다.

1일 광주 동구. 원각사 6월 민주항쟁 기념비 건립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7일 광주 동구 중앙로 197번지 원각사 원각루에서 6월 민주항쟁 기념비 제막식이 열린다.

행사는 1970~1980년대 원각사 스님과 청년 불자들이 독재에 저항해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양부남·안도걸·조인철·정준호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문선화 동구의장을 비롯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기념비 제작은 지난해 10월부터 현고대중사(원각사 회주)와 윤선종 작가가 맡아 익산 미륵사지석탑의 당간 지주에서 영감을 얻은 조형물로 6월 항쟁의 의미와 정신을 담은 형태로 제작했다.

기념비는 2.8m(가로)×1.5m(세로)×3m(높이) 규모로, 설치 비용은 지자체의 지원 없이 스님과 불자,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으로 마련됐다.

원각사 6월 민주항쟁 기념비 건립위원회 고문을 맡은 현고 대중사는 “6월 민주

항쟁 심장부였던 원각사에서 6월 민주항쟁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건립된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역사현장을 후손에게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금남로 원각사에 설치될 6월 민주항쟁 기념비

광산구 공장서 가스통 폭발…작업자 1명 숨져

광주 광산구 한 공장서 가스통 폭발로 건물 일부가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후 4시56분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서 “폭발소리와 함께 건물이 무너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 내부에 있던 50대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인명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공장 내 산소가스통이 폭발해 건물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은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임정호 기자 jh4415@gwangnam.co.kr

“중고차 구매 시 침수 이력 확인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무료 조회 인터넷 사이트 운영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침수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이목을 끌고 있다.

올여름 기록적인 호우로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대량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사이트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여줄 전망이다.

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함께 침수 중고차 불법 유통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자동차365(car365.go.kr)’를 운영한다.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중고차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해당 차량의 침수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침수 사실을 알지 못해 시세에 비해 과도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특히 누구나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정비업소 수리 기록, 성능 상태 점검업자 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 처리, 지방자치단체 자료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통로로 수집된 기록을 교차 검증할 수 있다.

이전까지 중고차 구매 예정자들이 침수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유료 조회를 하거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했다.

그러나 이는 보험 처리된 수리 내역만 확인이 가능했고, 일부 점검 기록은 허술하거나 조작 가능성이 지적됐다.

결국 소비자들은 공영사를 방문해 차량 하부 부식을 직접 확인하거나 바다를

새와 배선, 안전띠 등을 일일이 살펴보는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100%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비싼 가격에 침수차를 구매해야 하는 것이 업계 현실이었다.

앞으로 ‘자동차365(car365.go.kr)’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침수차를 확인하는 번거로움과 허점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이트는 자동차 관리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가 모두 조회 대상이어서 실제 올라온 매물이라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중고차

침수 정보 확인은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침수 정보를 조회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 처리를 의무화, 침수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의 2에 따라 폐차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